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4년 3월 20일 수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江原日報	21면	[동정] 심영곤 도의회 운영위원장(삼척)	1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1
강원도민일보	14면	정선군 의용소방대의 날	2
강원도민일보	04면	도 반도체산업위 출범 ... 위원장에 정광열 경제부지사	2
江原日報	01면	道 신청사 건립 정부 심사 통과... 토지 보상·설계 본격화	3
강원도민일보	04면	도 현안 사업 행안부 중투심사 조건부 통과	3
강원도민일보	01면	27 사라지는 학교 강원 학령인구 급감 6년간 27곳 통폐합 ...	4
강원도민일보	05면	교복 안 입는 학생들... "복장 단속·폐지 어려워 진땀"	5
江原日報	01면	강원지역 의대 4곳 정원 '150여명 확대안' 유력	6
강원도민일보	04면	의대 증원 배분 오늘 발표... 강원대·가톨릭관동대 대규모 ...	6
江原日報	04면	기후변화로 평화의댐 언제든 넘칠 수 있다	7
강원도민일보	13면	홍천국가항체클러스터 중투 통과 사업 탄력	7
江原日報	19면	[강원포럼] 지속 가능한 ‘올림픽 레거시’ 남겨야	8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무늬만 교육특구' 안 된다	9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유권자의 시간 엄정한 잣대로	10
江原日報	19면	[사설] 기업혁신파크 조성, 道·지자체 협치의 모델로	11
江原日報	19면	[사설]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정부 행·재정적 우선 지원을	12

江原日報

2024 03 20 ()

21

◇심영곤도의회 운영위원



장(삼척)은 20일
오후 4시30분 대
구 호텔수성 수
성스퀘어 3층에
서 열리는 대한

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
회 제10대 후반기 제6차 정기
회에 참석.

2024 03 19 ()

江原日報

[동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심영곤(삼척)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20일 오후 4시30분 대구 호텔수성 수성스퀘어 3층에서 열리는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6차 정기회에 참석.

이무철(춘천) 도의회 경제산업부위원장, 박찬흥(춘천).박대현(화천).이한영(태백) 도의원은 20일 오후 2시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리는 2024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인.재 채용 페스타 개막식에 참석.

엄윤순(인제) 도의회 농림수산부위원장은 20일 오전 10시 인제축협 가축시장에서 열리는 송아지 경매시장 개장에 참석.

강정호(속초) 도의원은 20일 오전 11시 속초시 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제3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에 참석.

최종수(평창) 도의원은 20일 오전 10시30분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2024년 평창군농어업회의소 대회원 총회에 참석.

진종호(양양) 도의원은 20일 오전 10시 양양소방서에서 열리는 제3회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에 참석.

최규만(횡성) 도의원은 20일 오전 10시50분 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솔리비스 횡성 공장신설 투자협약식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4 03 20 ()

14



정선군 의용소방대의 날 제3회 정선군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가 19일 정선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최승준 군수, 전영기 군의장, 김기철 도의원, 신동란 정선교육장, 최영수 소방서장, 김재학 군의용소방대연합회장, 박종범 농협 군지부장, 의용소방대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도민일보

2024 03 20 ()

04

도 반도체산업위 출범...위원장에 정광열 경제부지사

정책 방향·전문인력 양성 자문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위원회가 19일 출범했다. 도 반도체산업위원회는 강원도가 추진하는 반도체 산업 정책을 자문한다.

도 반도체산업위원회는 지난해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 이날 오전 춘천 세종호텔에서 출범했다. 강원도 반도체 산업의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기업 유치 등의 자문을 맡는다. 강원형 반도체산업 종합계획 수립 지원에도 나



선다. 정광열(사진)경제부지사가 위원장을 맡으며 박관희 도의원과 분야별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도 반도체산업위원회는 이날 강원도가 수립한 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안을 검토했다. 강원도는 위원회에서 도출된 논의사항을 보완해 이달 말 종합계획을 최종 완성할 계획이다. 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은 인력양성과 테스트베드, 부지 조성, 기업유치 등 강원도가 짚은 반도체 4대 전략을 포괄할 것으로 보인다. 김덕형

江原日報

2024 03 20 ()

01

道 신청사 건립 정부 심사 통과... 토지 보상·설계 본격화

춘천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사업은 재검토 결정

속보=올해 강원지역 주요 현안의 첫 정부 심사대인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본보 2월8일자 1면 보도)에서 '도청 신청사 건립사업'이 승인을 받은 반면 '춘천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건립사업이 고배를 마셨다.

중투심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광역지자체는 총사업비 300억원, 시·군의 경우 200억원, 행사성 사업은 50

억원 이상 신규 투자시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중투심을 통과하지 못하면 지방비를 쓸 수 없어 사업의 시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도청 신청사 건립사업(4,995억원)은 이번 심사 통과로 5월부터 토지 보상 및 설계 등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반면 춘천시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건립사업(230억원)은 '구체적 수요

와 적정 규모의 재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재검토 결정이 내려져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457억원이 투입되는 홍천 국가항체클러스터 2단계 사업은 세 번째 심사에서 통과했으며 강릉 천연물 소재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사업(458억원), 강릉 순긋~사근진 국민안심해안사업(227억원), 화천 사내지구 고령자복지주택 건립사업(228억원)도 첫 관문을 넘었다. 최기영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 03 20 ()

04

도 현안 사업 행안부 중투심사 조건부 통과

도청 신청사 건립 등 5개 사업

도청 신청사 건립사업 등 강원도 주요 현안사업들이 정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했다.

19일 본지 취재 결과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개최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이날 전국 광역 시도에 통보했다. 중앙투자심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지자체 신규 사업에 대해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총사업비 기준, 광역 지자체는 300억원 이상, 시·군은 2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을 추진할 시 해당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번 중앙투자심사에선 강원도가 올린 6개 사업 가운데 춘천시의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건립 사업을 제

외하고 모두 '조건부' 통과했다.

심사 통과 사업은 신청사 건립사업(4995억원)과 △강릉시 천연물 소재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사업(458억원) △강릉시 국민안심해안사업(250억원) △홍천군 국가항체클러스터 2단계 주요시설 조성 사업(481억원) △화천군 사내지구 고령자복지주택 건립사업(228억원)이다.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도청 신청사 건립 사업은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강원도는 다음달 신청사 건립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원주환경청에 제출, 협의를 마칠 계획이다. 6월부터 본격 보상 절차에 돌입하며 착공은 2026년 상반기, 완공은 2029년으로 계획했다. 김덕형 ▶ 관련기사 13면

강원도민일보

2024 03 20 ()

01

강원 통폐합 학교 현황

2019년

6곳

2020년

2곳

2021년

5곳

2022년

6곳

2023년

5곳

2024년

3곳



27

사라지는 학교

27.

지난 6년간 통폐합 된 강원도내 학교 숫자다. 수십년 된 학교가 사라지며 학생과 동문이 모교를 잃어야 했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결국 문을 닫아야 하는 학교들이 속출하고 있다. 2019년 6곳이었던

강원 학령인구 급감 도내 통폐합 학교는 2020년 2곳, 2021년 5곳, 2022년 6곳으로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 5곳이 통폐합됐고 올해는 벌써 3곳이 통폐합됐다.

문제는 학령인구가 무서운 속도로 줄면서 통폐합 학교 역시 늘어난다는 점이다. 올해 도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수는 9206명으로 집계됐다. 2025년에는 8643명을 기록해 올해 대비 563명 감소할 예정이다. 2027년에는 8020명, 2028년에는 7318명에 그칠 것으로 도교육청은 보고 있다. 2028년 초등학교 1학년 학생수가 7318명까지 떨어진다면 올해 대비 1888명이 감소하는 셈이다.

오세현 tpgus@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4 03 20 ()

05

교복 안 입는 학생들... “복장 단속·폐지 어려워 진땀”

도내 학교 복장규제 놓고 고심
일부 학교 교복 폐지 초강수도
학생 선호 디자인 변경 등 시도

교복 착용을 놓고 일선 학교가 고심에 빠졌다.

각 학교는 학생들이 규정에 맞는 옷을 입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미착용 학생에 대해 강력히 규제할 수는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결국 일부 학교는 교복을 없애버리는 ‘초강수’를 뒀다.

19일 본지 취재결과 흥천 A고는 올

해부터 교복을 입지 않는다. A고는 ‘학생들이 교복을 잘 입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복을 없앴다. 교사·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한 투표에서도 응답자의 70% 이상이 교복을 없애는 것에 찬성했다.

A고 교장은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학생들이 교복을 너무 안 입었다. 교권추락으로 선생님들이 단속도 제대로 못하고, 교복 문제로 아이들과 다툼이 생겼다 보니 ‘교육적으로 바람직한가’라는 고민이 생겼다”면서 “많은 학생들이 슬리퍼를 신고, 학교 체육복도 아닌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등교했다.

교육적으로 충격을 줘야겠다는 생각에 교복을 없앴다”고 밝혔다. A고 전교생은 400명이 넘는다.

강원도내 학교 현장이 학생들의 교복 착용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모든 학교가 A고와 같은 ‘극약처방’을 내리지는 못한다는 게 문제다. 교사들은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있다는 데 대체적으로 의견을 같이하지만 폐지 결정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춘천 B고 교장은 “오히려 무상교복이 된 후 더 안 입는 것 같다”면서 “학생의 복장이 불량해도 예전처럼 강력한 패널티를 줄 수가 없다. 교사들이 단속

해도 학생들과 갈등만 겪으니 학생자치회에 맡겨 자율적으로 복장을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영서권의 한 고등학교 교감도 “전부는 바라지도 않는다. 80%의 학생만이라도 제대로 입어주면 좋겠다”며 “지적을 해도 그때만 알겠다고 하고 바뀌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일부 학교는 학생을 처벌할 수 없어 반대로 교복을 제대로 착용하고 등교하는 학생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 등을 운영 중이나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원주 C고는 학생들의 교복 착용을

장려하고자 올해부터 새로운 디자인의 교복을 착용한다. C고 교장은 “우리 학교 역시 교복 착용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면서 “학생들이 교복을 즐겨 입도록 올해부터 학생들이 원하는 스타일로 교복 디자인을 바꿨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차원에서 교복 캠페인, 교복 데이 이벤트 등을 통해 학생들의 교복 착용을 독려 중”이라며 “학생들이 보다 편하게 교복을 입을 수 있도록 몸에 딱 맞는 기존의 교복에서 편한 생활복으로 디자인 변형을 진행 중”이라 밝혔다.

정민엽 jmy4096@kado.net

2024 03 20 ()

江原日報

01

강원지역 의대 4곳 정원 '150여명 확대안' 유력

정부, 의대생 2,000명 배정안 오늘 발표

정부가 20일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배정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강원지역의 경우 150여명 안팎의 정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대와 가톨릭관동대, 연세대 원주의대, 한림대 등 강원지역 4개 대학은 이날 초 200여명의 증원을 신청했었다.

▶관련기사 4면

그동안 정부는 의대 증원 2,000명 중 비수도권에 전체의 80%(1,600명), 수도권에 20%(400명)를 배분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특히 비수

도권 '거점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만큼 키운다는 계획이어서 지방거점 국립대인 강원대를 중심으로 도내 4개 의과대학의 정원도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의대 정원이 49명인 강원대는 100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학 측은 앞서 의대 정원을 현재보다 91명 많은 140명으로 신청했다.

미니 의대로 분류된 가톨릭관동대(정원 49명) 역시 대규모 증원이 예상된다. 정부가 미니 의대의 경우 원

비수도권에 80% 배분 방침

강원대 중심 큰 폭 증가 기대

의협·의대 교수들 반발 지속

활한 의대 운영을 위해 정원을 100명 안팎까지 늘려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톨릭관동대는 51명의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림대(정원 76명)는 30~40여명, 연세대 원주의대(정원 93명)는 27명의 증원을 신청한 상태다. 이에 따라 200여명 안팎의 증원 신청을 한 강

원지역의 경우 150명 이상의 증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가 20일 대학별 의대 증원인력을 발표하면 각 대학은 증원된 정원을 학적에 반영한 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승인을 받아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 최종 확정하고 5월 발표하는 '신입생 모집요강'에 반영하게 된다.

하지만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대한의사회(의협), 의대 교수들의 반발도 지속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브리핑을 통

해 "만일 의대별 정원이 확정 발표된다면 이는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동시에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다리마저 끊어 버리는 파괴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1,308명에게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공식 송달했다. 전날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의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 3개월 면허 정지를 최종 통지하기도 했다.

강동휘기자 yulnyo@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4 03 20 ()

04

의대 증원 배분 오늘 발표...강원대·가톨릭관동대 대규모 배정 가능성

관련 대학, 정부 지속적 지원 강조

정부가 의대별 정원 배분 결과를 20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와 입학정원 50명 이하 '미니의대' 위주의 증원 가능성이 높아져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9일 본지 취재결과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분 '2000명'에 대한 대학별 배정작업을 마무리하고, 20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증원 정원은 당초 정부가 밝힌 대로 비수도권 80%(1600명)·수도권 20%(400명)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

도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해 지역 필수의료강화할 것"이라며 "지역별 인구, 의료수요, 필수의료확충 필요성, 대학별 교육여건 등을 감안해 증원된 의대 정원을 먼저 권역별로 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증원은 그간 정부가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의대 증원의 근거로 삼아온 만큼 비수도권 거점국립대와 현 정원 50명 미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강원도내 의대는 강원대 의대(현 입학정원 49명)와 가톨릭관동대 의대(49명)다. 특히 강원대의 경우 거점국립대인데다 현재

비수도권 거점국립대 가운데 제주대(40명)에 이어 두번째로 입학정원이 적어 두 배 이상 증원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강원대가 정부에 제출한 증원 희망 규모는 현 정원에서 91명이 늘어난 140명이었다.

가톨릭관동대 의대 역시 영동권에 자리잡은 유일한 의대라는 점에서 대규모 증원 가능성이 나온다. 대학들은 증원 이후 정부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원대 관계자는 "100명에서 140명 사이로 증원되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면서 "단순 증원에 그치지 않고, 교수·교재·시설 등 동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이 꼭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정민엽

江原日報

2024 03 20 ()

04

기후변화로 평화의담 언제든 넘칠 수 있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2040년부터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요 담들이 폭우로 인해 넘치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최근 강원지역에서 비와 눈이 자주 내리는 등 강수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기후 위기로 인한 대규모 피해 우려가 현실화되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기후 위기 적응 및 대응 실태(사회기반시설 분야)'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강수량이 늘고 집중호우가 잦아지며 평화의담과 청평담은 2040년 이전에도 언제든지 넘칠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분석

감사원 '침수 위험 증가' 예측

강수량 늘고 집중호우 잦아져
2040년 이후 사고 가능성 커져
소양강담·횡성담도 아슬아슬
정부에 개선 방안 마련 통보

됐다. 강수량은 늘고 집중호우는 잦아졌지만, 담의 설계 기준은 20년 전 기후를 바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소양강담은 장기적으로는 물이 넘치거나 사고의 위험이 높아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과 같

은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되면 2071년부터는 소양강담마저 넘칠 것으로 예측됐다.

횡성담은 2040년까지는 물이 넘치지 않지만 2041년부터는 담이 감당할 수 있는 양보다 많은 비가 내리며 넘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대응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팔당담, 횡성담은 물론 소양강담·충주담 같은 한강 상류 대규모 담까지 넘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강원지역은 최근 강수량과 적설량이 가파르게 늘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 겨울(2023년 12월~2024년 2월) 강원자치도 내 강

수량은 227mm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1991년부터 2020년까지 30년간의 평년 강수량은 87.6mm로, 2023년 겨울 2.6배의 비와 눈이 더 내린 셈이다. 눈·비가 온 일수도 25.4일로 평년(19.4일)보다 많았다.

감사원은 "정부가 기후 위험에 대한 과학적 예측이 없거나 부족한 채로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설계기준·사업 등을 수립·추진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행안부와 환경부 등에 미래 기후변화 요인을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박서희기자 wiretheasia@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4 03 20 ()

13

홍천국가항체클러스터 중투 통과 사업 탄력

비즈니스센터 등 2단계 사업
내년 착공 목표 설계용역 재개
"미래 먹거리 사업 추진 최선"

홍천국가항체클러스터 2단계 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홍천군바이오산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19일 본지 취재결과, 홍천국가항

체클러스터 2단계 사업은 총 사업비(1·2단계 사업) 규모가 500억원을 초과해 행안부가 사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분류했으며,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지난해 7월 중앙투자심사에서 한차례 반려됐었다.

이에 따라 군은 같은 해 9월부터 연구용역을 실시, 사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업을 2단계로 분리, 사업비 규모를 조정해 중앙투자심사에 재도전했다.

유상범 국회의원실은 1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중앙투자심사 통과 결과를 통보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홍천국가항체클러스터 1단계 사업은 중앙체면역항체 연구시설, 스크립스코리아항체 연구원 건설 등으로 이미 사업비 10%가 지급되는 등 착수됐다.

이번 심사에 통과한 2단계 사업은 항체산업비즈니스센터, 종합지원센터, 기숙사 건립 등으로 군은 중단된

설계용역을 즉시 재개,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유상범 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책겨운 사업인 만큼 향후 설계와 착공, 준공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환영하며 홍천의 미래 먹거리 사업인 국가항체클러스터를 빈틈없이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유승현

江原日報

2024 03 20 ()

19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 큰 흥행을 몰고 오며 성대하게 막을 내렸다. 이번 올림픽은 아시아 최초이자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청소년올림픽이며,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6년 만

에 다시 열린 ‘빅 이벤트’라는 점에서 평창군과 강원특별자치도가 명실상부 글로벌 문화체육도시임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한파와 감염병이라는 여러 악재를 딛고 예상의 두 배를 뛰어넘는 50만여 명의 방문객 수를 기록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등의 문화예술공연과 바닷가 갤러리 등 다양한 문화행사도 함께 열려 ‘K-컬처’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78개국 1,800

여명의 꿈나무 선수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평생 눈을 구경하기 힘든 국가에서도 많은 선수가 참가해 세계인의 축제다운 면모를 보였다. 특히 태국의 아그네스 선수는 태국인으로서는 처음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되었고, 튀니지의 루리미 선수 역시 마찬가지로 튀니지 최초의 동계올림픽 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러한 성과들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물려준 ‘올림픽 레거시’를 통해 가능했다. 이번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은 유형의 레거시인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남긴 경기시설을 재활용해 평창올림픽 당시 예산

강원포럼

최종수 강원특별자치도의원



2조7,890억원의 3.5%인 967억원의 예산만으로 대회를 치러 엄청난 비용 절감 효과를 누렸다. 무형의 레거시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가 2004년부터 추진해 온 ‘드림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동계스포츠를 접하기 쉽지 않은 국가의 청소년들을 지원해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 등에도 기여한 프로그램으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열기를 이어 갈 전국동계체육대회가 평창을 중심으로 개최됐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5년 동안 전국동계체육대회를 단독 개최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또 평창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에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 연맹 아시아 지사가 들어서고 5년간

봅슬레이, 스켈레톤 월드컵과 아시안컵을 개최하게 된다.

지속 가능한 ‘올림픽 레거시’ 남겨야

다른 올림픽에 비해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은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흥행을 일으켜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의문이나 경기시설 사후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우려의 시선, 그리고 고질적인 과제인 지역 침체와 인구 소멸 등의 문제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선 지속 가능한 ‘올림픽 레거시’를 남겨야 한다. 평창과 강원도 동계스포츠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한 때다.

2023년까지 97개국 2,528명의 청소년이 혜택을 받았다. 이 드림 프로그램의 일환인 ‘눈 없는 나라 동계스포츠 청소년 선수 육성 지원 사업’을 통해 눈이 없는 나라, 겨울이 없는 나라의 동계종목 청소년 선수들을 이번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 출전시켰고, 아그네스, 루리미 선수와 같은 국가 최초 메달 획득 사례들도 배출해 내며 전 세계가 하나 되는 화합의 올림픽을 구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듯 올림픽 레거시는 단순히 대회가 끝나고 남겨진 물리적인 시설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적 변화를 포함하

강원도민일보

2024 03 20 ()

/ 19

‘무늬만 교육특구’ 안 된다

-정부 예산 교부 방식·규모 기대 못미쳐

춘천·원주·화천이 정부의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돼 해당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큼니다. 특구를 통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예산이 지자체가 아닌 교육청으로 내려와 운영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더구나 지원 규모도 예산을 밀돌아 시군의 불만이 높습니다. 정부가 세밀한 법률 검토 없이 발표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특구가 이름에 걸맞은 정책으로 안착하려면 해당 지자체와의 소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양방향으로 의견을 교환해 교육발전 방안을 협의하고 해법을 모색할 때, 특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최근 열린 교육부와 교육청, 지자체와의 협의회에서 표출됐습니다. 지자체들이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산 교부 방식입니다. 이들 시군은 교육발전 특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의 50% 이상을 지자체가 매칭하게 돼 있으나, 교육부 예산이 교육청으로 내려와 원활한 추진이 힘들다고 주장합니다.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각 교육청에 보내면, 교육청이 다시 특구에 선정된 지자체의 교육지원청에 예산을 교부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지자체는 예산을

세울 때 ‘매칭 사업’이 아닌 ‘신규 사업’으로 추진해야 해 예산 확보가 수월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구상은 지자체가 했는데, 예산을 교육청에 지원하면 사업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예산 규모도 논란입니다. 당초 교육부가 약속했던 규모는 최대 연간 100억 원이었으나 30억 원으로 축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시군 관계자들은 지자체마다 30억 원으로 정해 사업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는 반응입니다.

교육발전 특구 발표 당시, 선정된 시군은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인구를 유입할 계기를 만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 생태계 혁신과 함께 교육 선택권 확대, 교육 거버넌스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교육도시 과와 산학 협력과로 부서를 개편, 각각 초·중등 교육과 대학 협력을 맡게 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선 교육특구 예산 지원 방식과 규모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늬만 교육특구’라는 냉소적인 반응도 없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특구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4 03 20 ()

/ 19

유권자의 시간 엄정한 잣대로

-내일 후보자 등록, 검증하는 토론회 활성화돼야

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이 21일과 22일 진행됩니다. 4월 10일 선거일에 앞서 4월 2일부터 5일까지는 선상투표가 있으며, 사전투표는 금요일과 토요일인 4월 5, 6일 개최됩니다. 지역구에 출마하는 주요 정당의 공천자가 확정됐으며, 일부 예비후보자의 불출마 등으로 대결 구도는 거의 확정 단계입니다. 강원 출신이 타 지역에서 출마한 경우도 있고, 주요 정당 비례대표 후보 순위에도 출신 여러 명이 포진하고 있어서 정당 지지도에 따라 어느 정도 국회에 진출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번 총선은 공천 과정에서 현역의원이라도 하위 활동인 경우는 배제하고, 당원 권리를 더 높이는 등의 변화가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열기가 뜨거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당 국민의힘에서는 거야 심판을, 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권 심판을 호소하며 대립각을 세우는 중입니다. 강원도내 지역구 8석을 놓고 국민의힘은 전체 의석을, 더불어민주당은 과반수 확보해 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정당 선거 구호와 정책, 지역구 및 비례 후보자의 면면과 공약을 세심하게 살펴 엄정한 잣대를 대는 유권자의 시간에 들게 됩니다. 정당을 선택하

고, 국회에서 일할 기회를 달라는 호소를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국민 복리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적합한 정당과 후보를 제대로 따져보는 유권자의식을 발휘할 때입니다. 생활과 밀접한 것이 정치이고, 주권자 뜻이 반영되는 것이 선거입니다. 민주사회는 높은 수준의 정치 참여를 통해 이뤄집니다. 투표는 비밀로 행해지고, 일회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기에 소홀하게 취급할 수 있으나 투표 결과는 국가와 공동체 사회에 큰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정당 정책과 공약이 실효성이 있는지 살피려면 검증 기회가 다양해야 합니다. 정당과 후보자는 유권자들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법정 토론회에 국한하지 않고 언론사 토론회를 비롯해 각종 정책을 비교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선거 유불리를 따져서 토론회를 무산시키는 것은 유권자에게 제한된 정보를 주겠다는 것으로 불신을 자초할 수 있고 유권자 지지를 어렵게 합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는 유권자의 선택을 방해합니다.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공약을 검증하려면 질의토론이 주어지는 토론회가 자주 열려야 합니다. 후보자 등록을 계기로 토론의 장에 적극적일 것을 요청합니다.

江原日報

2024 03 20 ()

/ 19

기업혁신파크 조성, 道·지자체 협치의 모델로

김진태 지사와 육동한 춘천시장이 지난 18일 춘천시 남산면 광관리 일원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 장소를 방문해 주목을 끌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인 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춘천시가 협업(協業)을 통해 성공적인 기업혁신파크 조성 의지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날 현장에서 김 지사는 드론 실시간 촬영을 통해 사업 부지를 살펴보고 춘천시와 기업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김 지사는 “기업혁신파크는 10년 뒤 바이오, IT, 정밀의료 등 첨단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춘천시민의 숙원사업

이었던 점을 고려해 기존보다 착공을 1년 앞당겨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육 시장은 “성공 조성을 위해 도를 비롯해 정부, 영

거기업과 협력하고 주민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가 추진 속도에 방점을 뒀다면, 육 시장은 협력과 소통에 방점을 뒀다. 기업혁신파크 조성은 그동안 춘천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관점의 차이가 있지만 지사와 시장이 현장을 찾아 서로가 사업 성공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한 자체가 의미 있고 긍정적이다.

이 프로젝트는 도와 춘천시, 더존비즈온 등이 남산면 광관리 산 68번지 일원 368만㎡에 9,364억원을 투입해 디지털시티, 개방형 산학협력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는 지역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되는 것은 물론이다. 즉, 민간 기업과 자치단체가 지역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면서 자족성을 갖춘

국토 균형발전의 새로운 거점을 형성하게 된다. 벌써부터 주민들 사이에선 기업혁신파크 조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지역 발전의 정체로 불황의 긴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역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도와 춘천시는 기업혁신파크 조성이 전국 최고의 협치 전범(典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와 기초자치단체는 ‘상생’ 관계여야 한다. 서로가 경쟁 관계일 수 없다. 화합과 협조의 분위기 속에 공동 발전의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지방자치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치단체 간 연대를 통해 동질성을 확인하고 공동시책을 도모하는 것은 분열보다는 단합이 더

김진태 지사·육동한 시장 춘천 광관리 방문

민간 기업 투자 촉진 등 지역 발전 새 이정표

프로젝트 정보 공유로 시너지효과 내야 할 때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김 지사와 육 시장이 남산면 광관리 현장을 방문한 것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민선 이후 광역자치단체인 도와 일선 기초자치단체 간 불협화음은 자치단체 간 사업에 대한 정보를 서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일어났다. 이런 경우 도는 일선 기초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규모, 범위, 자원 등 정보를 공유하지 못해 먼발치에서 구경이나 하는 꼴이 되어 버린다. 그러나 도는 어떤 형태로든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간 조화로운 성장을 위해 기초자치단체가 벌이는 사업에 대해 최소한의 조정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그래야 사업의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춘천의 기업혁신파크 조성이 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江原日報

2024 03 20 ()

/ 19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정부 행·재정적 우선 지원을

정부와 인구감소지역 자치단체장들이 함께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대응책을 모색해 주목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5곳 및 89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12개 시·군을 포함, 전국 89곳의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과 정부가 공동 협력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정부와 인구감소지역 지자체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2022년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자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10년간 10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전국의 89개 지자체는 2023년 국회에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지자체들은 이 자리에서 지역별 현안 과제를 알리고 이들 지역에 대한 특례 발굴과 재정보조 확대 등 행·재정적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행안부는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중점 추진하는 정부 정책을 소개했다. 우선 '생활인구' 산정 대상 지역을 지난해 7개 시범지역에서 올해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확대한다. 또 2025년부

터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체계를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개선해 각 지자체의 평가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정부와 민간의 재원을 연계해 대규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도 안내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모금방법 제한을 일부 완화하고, 연간 기부액 상한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민간플랫폼에서도 기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밝혔다.

지방의 인구 대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다. 따라서 정부와 인구감소지역 지자체들의 협조체계 구축이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근원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지역도 다르고 지자체마다 대응전략도 다르지만 모두가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에서 각자도생이 아닌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데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인구 정책 전문성을 높이고 지자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을 위한 제도 혁신, 정책 반영 및 예산 지원 등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인구감소지역의 건의를 적극 수용하길 기대한다.